

‘친노’ 강금실 전 장관, 민주 선대위 상임위원장 합류

민주, 오늘 선거대책위 체제 전환
진영·계파 초월 ‘통합형 캠프’ 추진
보수진영 추가영입 가능성 내미쳐
김동연·김경수·박용진·우상호 합류



강금실 전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민주당 선대위 합류 제안을 받아 전날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했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무현계’ 인사다.

이 후보와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캠

프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이번 영입은 계파와 진영 불문하고 당 안팎의 경륜있는 인사를 폭넓게 등용하겠다는 인선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원장은 강 전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명 안팎의 당 내외 인사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14 차례나 ‘통합’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진영을 초월해 함께할 수 있는 중도·보수 진영의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의원을 직접 만나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지 선대위에 합류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막판까지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 합류)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라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전직 총리의 예우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김 전 총리의 경우 연배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선대위원장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韓 출마에 “내란 동조자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헌정 파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 총리는 12·3 내란의 동조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긴 주범”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국민과 헌법을 배반하고 사사로운 권력욕에 빠져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민주당 전남도당은 헌정질서를 짓밟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조인철 “국회 도심융합특구포럼 출범”

‘광주 특구’ 성공 박차

광주광역시 등 지방 도심 활성화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29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포럼 출범식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전략 등을 모색했다.

출범식에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광주와 대구, 대전, 울산,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조인철 의원

조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 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사고는 SKT가 치고, 피해는 왜 고객들이”

과방위 청문회 SKT 대표 출석 추진 혁신당 차규근 “징벌적 손해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SKT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피해는 왜 오롯이 고객들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장은 “SK텔레콤은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히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평소 광고문자, 전화를 남발하더니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140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왜 국민들이 140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동동거려야 하나”라며 “극단적 무책임이며, 참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데 예방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후 책임규명 수단이 부재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왼쪽)·한동훈 후보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3차 경선 결과 발표 후 꽃다발을 들고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경선에 탈락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후보가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여의도 당사를 나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문수·한동훈, 국힘 경선 진출… 내달 3일 후보 선출

1~2일 당원투표·여론조사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이름순)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2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 후보와 찬성했던 한 후보가 2파전을 치르게 되면서 경선 막바지 ‘반탄파’와 ‘찬탄파’ 간 세 결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가 진행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 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한편 이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기재부 분리·검찰개혁 베푸는 민주당

정권교체 성공시 조직개편 예고 예산 기능 떼어내 예산처 부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물론, 기존 정부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중폭 이상 개편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29일 당내에서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선휘 예산처는 국무총리 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정부 부처들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 기존의 정책 수립·조정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 역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 국수분과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대담과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기존 경제·사회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능을 일부 분리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